

공정거래 4대 실천사항

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·운용을 위한 실천사항



(주) 에프에스티

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·운용을 위한 실천사항

제1조(목적)

이 실천사항은 주식회사 에프에스티(이하 “당사”라 한다)가 공정거래위원회의 「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·운용을 위한 실천사항」을 준용하여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스스로 사전에 심의할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 및 운용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(심의 대상)

① 위원회는 하도급거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 심의한다.

1. 거래(예상)규모 36억원 이상인 계약의 체결 및 가격 결정의 공정성 관련 사항
2.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하도급법’이라 한다) 관련 사항
 - 가) 서면계약서 발급의무 준수 여부
 - 나) 내국신용장 개설의무 준수 여부
 - 다)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 준수 여부
 - 라)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위반 여부
 - 마) 물품 등의 구매강제금지 위반 여부
 - 바)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위반 여부
3. 협력업체의 등록 및 취소 관련 사항
 - 가) 협력업체 등록·취소 기준 및 절차의 적절성 여부
 - 나) 협력업체 미선정 또는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신청의 건
4. 상생협력 지원 프로그램 관련 사항
5. 기타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에 위배되는 사항

② 위원회는 전 항 이외에도 협력업체와의 거래금액이 36억원 이상인 거래 계약이 종료 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하도급거래의 적법성을 사후 검증하여 심의할 수 있다.

1. 지급기한 내 대금지급 여부
2. 하자보수 책임의 부당전가 여부
3. 기술유용행위 발생 여부

4. 기타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발생 여부

제3조(위원회 구성 및 운영)

- ① 위원회는 하도급 관련 업무 담당임원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회사의 임원으로 구성하고, 필요한 경우에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.
- ② 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한다. 단, 현안이 발생한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-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련 협력업체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 단, 필요한 경우에 익명성을 보장한다.
- ④ 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조치사항 등 위원회 관련 문서는 심의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관한다.

제4조(사후 관리)

당사는 위원회의 심의 안건이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시정하며, 관련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(인사상 불이익 등)를 취하여야 한다.